

文대통령 “국민청원, 곤혹스러워도 바람직”

직접민주주의 강화 의지 밝혀
“참여인원 적어도 성실히 답변을”
‘포스트 차이나’ 시대 첫 언급하며
“신남방정책 후속 조치 잘해달라”

운영 3개월째를 맞아 각종 청원이 몰려들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게시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를 뛰어넘는 각종 청원에도 불구하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당장 해결 못 해도 장기적으로 참으”**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8월 19일 운영을 시작한 청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4만58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다만 문 대통령이 “수용 불가능”이라고 한 것은 ‘제사 폐지’ 등 법으로 규정하기 힘든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식 밖의 청원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을



11월 20일자 A1면.

다 해결할 수 없더라도 청원 게시판을 통한 여론의 흐름을 통해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청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늘어나면서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해 청와대 및 각 부처가 답변하도록 정해 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참여 인원이 기존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려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내 20만 명’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청원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지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20만 건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원 내용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관련 내용이 입안되거나 정부 시책으로 결정될 경우 별도로 답변이나 설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는 기조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사랑의 열매’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방송인 박수홍 씨로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 모형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희망 2018 나눔캠페인’의 1호 기부금을 이날 냈다. 가운데는 박 씨와 함께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탤런트 채시라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 “포스트 차이나 시대 준비”

최근 동남아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 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아세안과의 인적·물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포스트 차이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

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심각성을 문 대통령이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신남방정책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과 함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변영 축을 이루면서 우리 외교와 경제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남방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홍종학 중기장관 오늘 임명할듯

靑 “결정적 흠결없고 공백 메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없었고 신설 부처의 수장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20일 말했다. 이날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직권 임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홍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다섯 번째 고위 공직자가 된다.

다만 홍 후보자 임명 이후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한 카드를 놓고선 여전히 고민이 깊다. 임기 만료로 앞둔 감사원장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게 홍 후보자 임명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수 후보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후보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나 시일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인선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력에서는 강기정 오영식 정장선 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강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이동이나 대통령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 선임인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의 승진 가능 가능성도 있다. 또 국회의외의 소통 업무를 주로 맡아온 한병도 정부비서관의 발탁도 거론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www.scra.or.kr

어서와~ 렌트는 처음이지?

편리한 이용
230여개 회원사 4,400여 영업망

비용절감효과
렌탈료 이외의 비용 NO, 업무 비율에 따라 손금 인정

자유로운 이용
대여기간, 거리, 유종 자유롭게 선택 가능

재무구조개선
기업제 부채비를 개선 등 부외금융 효과

고객 맞춤형 차량제공
개인 여행부터 법인 업무용까지 다양하게

One Shot Service
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전화 한통으로 해결

간소한 업무처리
차량검사, 보험가입, 세금납부 등 렌터카 업체가 처리

Total Care Service
사전 및 정기 순회 정비로 완벽한 유지관리 보장

국민의당, 오늘 黨진로 놓고 끝장토론

국민의당 전현직 지도부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전 회동을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끝장토론’을 하루 앞두고 중도통합론에 대한 의견을 들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주선 전 비대위원장, 안 대표, 송기서 대표비서실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박지원 전 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뉴시스

안철수 “통합 통해 제2당 될수 있다” 정동영 “중도보수로 가면 소멸한다”

反安측 안대표 사퇴요구 움직임에 親安 “전당대회 열어야 할 사안”

분당 등 극단적 상황 치닫기보다 불편한 공존관계 지속할 가능성

문제가”라고 밝혔다.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오찬회동 참석자는 “그 사람(안 대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고, 한 친안(친안철수) 그룹 의원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단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다 듣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은 당내 거센 반발을 의식해 21일 의총 발안 수위나 통합 행보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한 통합파 의원은 “강력 반발해 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거라면, 정식으로 전당대회 소집 요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원들의 의사는 안 대표 지지에 쏠려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통합 속도를 80km로 갈 것이나, 혹은 70km로 갈 것이나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보다는 당내에서 불편한 공존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다. 반안 그룹 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칭)’도 탈당 후 세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수준이다.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정동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도보수정당을 반대한다. 중도보수정당으로 가선 소멸한다”면서 “안 대표를 흔들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당실에 선을 그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